

오피니언

11

사설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포 이후 전국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내란을 시도한 윤 대통령은 하루 빨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결정이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난 3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헌법은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로 규정한다. 하지만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근거로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지속적인 고위 공무원 탄핵 시도를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뤄진 여당 대표와의 회동에선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군사적으로 처리하는 폭력적인 대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판단력도 이미 상실한 모습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시민들은 밤새 계엄군이 탄 헬기와 장갑차 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었다. 무장한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

계엄 사태를 다시 한번 마주한

기성세대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녀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이 없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상당수 사라졌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행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곤두박질친 밤이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중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은 매우 경악스러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모든 언론의 출판 및 보도를 검열했다. 우리신문도 당시 3개월 동안 신문을 발행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우리신문도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을 뻔했다.

계엄 사태 이후 학내 구성원들

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이어졌다. 정권 퇴진을 외치는 대자보는 연대 서명한 학생들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도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리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학내 구성원 86%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대학생 윤석열은 모의재판에서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40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모의재판이지만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자의 길을 걸으려 했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조속히 내려놓길 바란다.

세시봉

비혼 출산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지난달 모델 문가비가 출산 소식을 SNS에 알렸다. 그런데 아빠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충격적 소식이 들려왔다. 그저 단순 연예계 가십거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 일은 한국 사회에서 꼭 토론해봐야 할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줬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 출산으로 형성된 가족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정씨는 아이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고, 이미지 관리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광고 촬영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행복하게 자라는 조건 중 하나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제시한다면, 부모와 살지 않음에도 행복한 가정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행복만을 이유로 같이 산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거란 보장도 없다.

혼외자 출산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비혼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한국 비혼 출산율은 2.5%였지만, 2023년에는 4.7%로 상승했다. 젊은 층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대의 4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래엔 부모,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프랑스 파스(PACS) 제도를 참고할만하다. 파스는 두 사람의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혼인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는 결혼보다 훨씬 간단하다. 꼭 혼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두 동거인 사이의 자녀는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비혼 출산 관련 제도의 정책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이 늘어나고 결혼 인식이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양육권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어찌면 고차 방정식이라 불리는 출산율 문제도 이 과정에서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환영하고 지원하는 포용적인 사회적 인식이 한국에도 확산하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동대문01번 노선 수정 논란

안전과는 타협불가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동대문01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도로 사정, 부족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남겨진 것은 학생 안전 위협이다.

동대문구청, 구의원은 '주민편의'를 위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골목 상황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편의인지 이해할 수 없다. 홍릉 쪽에서 회기역으로 가는 버스를 추가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릉 주민을 위한 버스 정류장이 3개나 있는 상황에서 노선 변경 필요성은 의문스럽다.

동대문01을 이용하는 승객은 다양하겠지만 승객 대부분은 우리학교 학생과 경희의료원 방문자다. 하지만 의료원과 학교는 노선 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주 이용자 상의 없

이 추진한 것이 주먹구구가 아니면 무엇이랄 할 수 있는가.

노선 수정을 위한 준비성 부족은 결국 서울시청의 동대문구청 자료 보완 요구로 드러나게 됐다.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 승인이 필요한데, 서울시청은 동대문구청에 자료 보완을 지시했다. 노선 수정에 주민 의견 반영과 구체적 분석이 없었음을 보여준 사례다.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학가는 학생이 학업과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책임이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노선 변경 추진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동대문구청과 유관 부서는 노선 변경을 강행하기에 앞서 학생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 진단을 진행한 뒤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길 바란다. 이번 노선 변경을 강행하기보다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만평 먹자골목에 마을버스가 통행할 경우 학생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